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연구원

2012. 4. 9(월)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요 약

- OECD의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2011.12)은 최근의 전 세계적인 불평등도 확산 현상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제9장에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소득비중 추이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았음
-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s) 자료를 활용하여 OECD 17개국의 상위소득 비중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30년 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소득 비중 증가의 원인으로는 소득세 한계세율 인하의 과급효과,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달, 노동여건 변화 등이 지목됨
- 상위소득 비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 및 축소,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다만, 한계세율 인상 정책은 노동공급 및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반면,
 - 비과세·감면제도의 폐지 및 축소는 상대적으로 시장왜곡의 정도가 약하여 세수확대 및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소득자가 상위 1%를 차지하였음
 - 자료의 한계로 상위 1%의 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는 대신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인원 비중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2006년 소득금액 1억원 초과 인원이 전체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6%)
 -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의 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 전체 소득세 세수 중 상위 1%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43.9%로 미국 40%와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 24%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국가별로 자료 가용 범위에 따라 집계연도, 소득정의, 과세단위 등에 차이가 나므로 국가간 일괄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주요국 상위 1% 소득자 현황

국가 (기준연도)	한국 (2006년)	미국 (2008년)	영국 (2007년)	캐나다 (2007년)	호주 (2008년)	일본 (2005년)
상위 1% 소득 비중	16.6%	17.7%	14.3%	13.3%	8.8%	9.2%
소득비중 증가율 (1980~최근)	-	116%	113%	64%	83%	28%
상위 1% 소득 최소값	1억원	USD 335,861	-	-	AUD 199,383	1,379만엔
상위 1% 소득세 비중	43.9%	40%	24%	-	-	-

주 1: 우리나라는 상위 1%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2006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주요국은 각 국가별 가용한 최신자료 사용

2: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세 항목과 원천세 중 근로소득세 항목의 소득금액 및 세액 집계 자료를 결합하여 상위 1% 소득 및 소득세 비중 산출

3: 주요국의 상위 1% 소득 및 소득세 비중은 OECD(2011)에서 재인용

4: 주요국의 상위 1% 소득 최소값은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미국·호주) 및 Moriguchi and Saez(2007, 일본)에서 추출

- 부가적으로 설문조사 자료(재정패널조사, 가계금융조사)를 사용하여 상위 1% 소득 비중의 최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약 7~8% 수준을 보여 국세통계연보 활용 결과값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고소득층 표본의 과소표집 및 축소 응답 문제로 인해 상위 소득 비중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가계금융조사 자료에서는 상위 1% 소득 비중이 2006년 6.5%에서 2011년 8.2%로 5년간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 소득자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 자료의 직접적인 활용이 요구됨
 - 기존 연구에서 소득분포 연구에 사용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상위 소득자 표본의 정확도가 떨어져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으며,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과는 소득세 집계자료와 간략한 방법론을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미시 수준의 소득세 신고 자료 확보 및 정교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함

I 서론: 연구의 배경 및 활용 방향

- 최근 들어 빈부 간의 격차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통합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분배와 재분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지난해부터 전세계적으로 개진된 “Occupy Wall Street” 운동은 상위 1%가 불공정하게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99%의 반발이 표출된 것임
 -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복지 공약도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함

-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2011.12)에서는 상기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OECD 회원국에서의 불평등 확산 현황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원인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함 (목차는 부록 1 참조)

- 그 중 제9장은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조세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고찰함
 -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성과가 고르게 분배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됨
 - 예를 들어 미국과 프랑스의 평균 실질소득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상위 1%를 제외했을 경우 소득증가율이 역전되어 성장의 분배가 프랑스에서 더 고르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1-1> 미국과 프랑스의 1975 - 2006 평균 실질소득증가율¹⁾

	전체	상위 1% 제외
미국	32.2 %	17.9 %
프랑스	27.1 %	26.4 %

1)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4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 단, 상위 1%가 전체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분배가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주제라 할 수 있음

- 상위 계층 소득 비중 분석을 통해 고소득자의 납세능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조세정책 수립시 반영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OECD 보고서를 요약하고(제III장),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조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제III장)



“Trends in top incom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 요약

1. 자료 및 연구 방법론

-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s)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소득 중 상위 1%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기 위해 Atkinson and Piketty(2007)의 방법을 사용함*

- 본 보고서에서는 Atkinson 등이 구축한 국가별 자료 중 OECD에 가입한 17개 국가의 자료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함(국가 목록은 부록 2 참조)

- 상위계층 소득 분석을 위해 표본가구 설문조사 자료 대신 소득신고 미시자료 및 신고자료 집계 정보를 사용할 경우,

- 1) 장기간(50년 이상)의 전수 자료로 분석을 시행할 수 있고,
- 2) 과세당국의 검토를 거친 비교적 정확한 정보이며,
- 3)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한 이점이 있음

- 국가 간 비교 혹은 시점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함

- 근로, 사업, 자본 소득의 정의 및 측정방식, 절/탈세의 범위, 과세 대상 등이 국가별로 상이함
- 세계개편이나 과세자료 발표형식의 변화에 따라 시점 간 비교시 오류 발생 가능함

* 참고: 소득세 신고자료로 상위 1% 소득의 비중(對 전체 소득)을 구하는 방법

- ① 전체 인구 산출
 - 과세 단위가 개인일 경우: 일정 연령 이상 전체 인구 혹은 경제활동인구
 - 과세 단위가 가구일 경우: 가구당 인원 수 감안하여 조정
- ② 전체 소득 산출
 - 과세자료에서 추정하거나 국민소득 계정 활용
- ③ 보간법(interpolation) 적용하여 상위 1%의 소득 계산
 - 파레토 분포를 가정하고 구간 단위로 표시된 소득신고 자료로부터 정확한 소득분포 추정
 - 상위 1%, 0.1% 등의 평균소득과 상위계층 소득의 비중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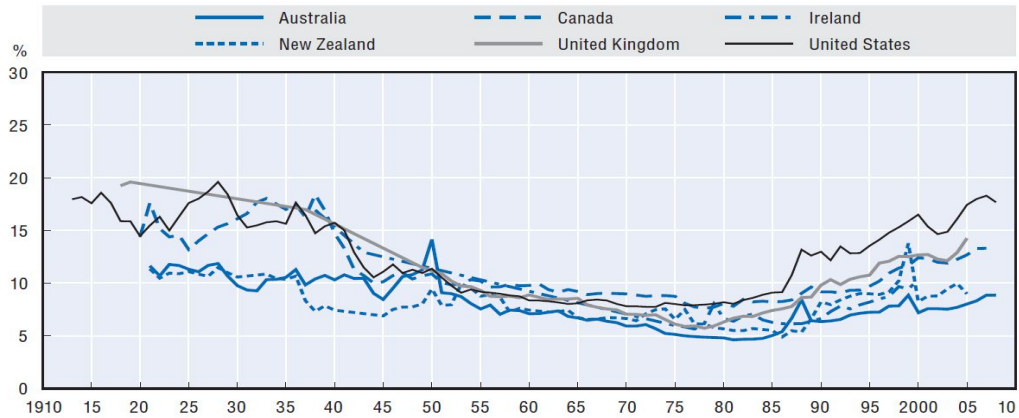
2. 상위계층 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 및 구성

가. 상위 1% 소득 비중의 추이

- (Figure 9.1) 영어권 국가에서 상위 1%의 세전소득의 비중은 70년대 이전에는 감소하였고 80년대부터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최근 30년간 미국의 상위계층 소득 비중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 2008년 미국 상위 1% 소득은 전체의 17.7%를 차지함
 - 미국 외 영어권 국가에서도 30년 간 상위계층 소득 비중이 증가함
- (Figure 9.2)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20세기 중후반까지 상위계층 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최근 30년간은 영어권과 달리 국가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임
 -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30년 전에 비해 더 낮은 상위소득 비중을 보이며, 그 외 국가에서는 30년 간 상위 1% 소득 비중이 약간 증가함
 - 독일은 10% 대를 유지하며 소폭의 등락을 반복, 노르웨이는 최근 자료에서 급격한 하락을 보임

6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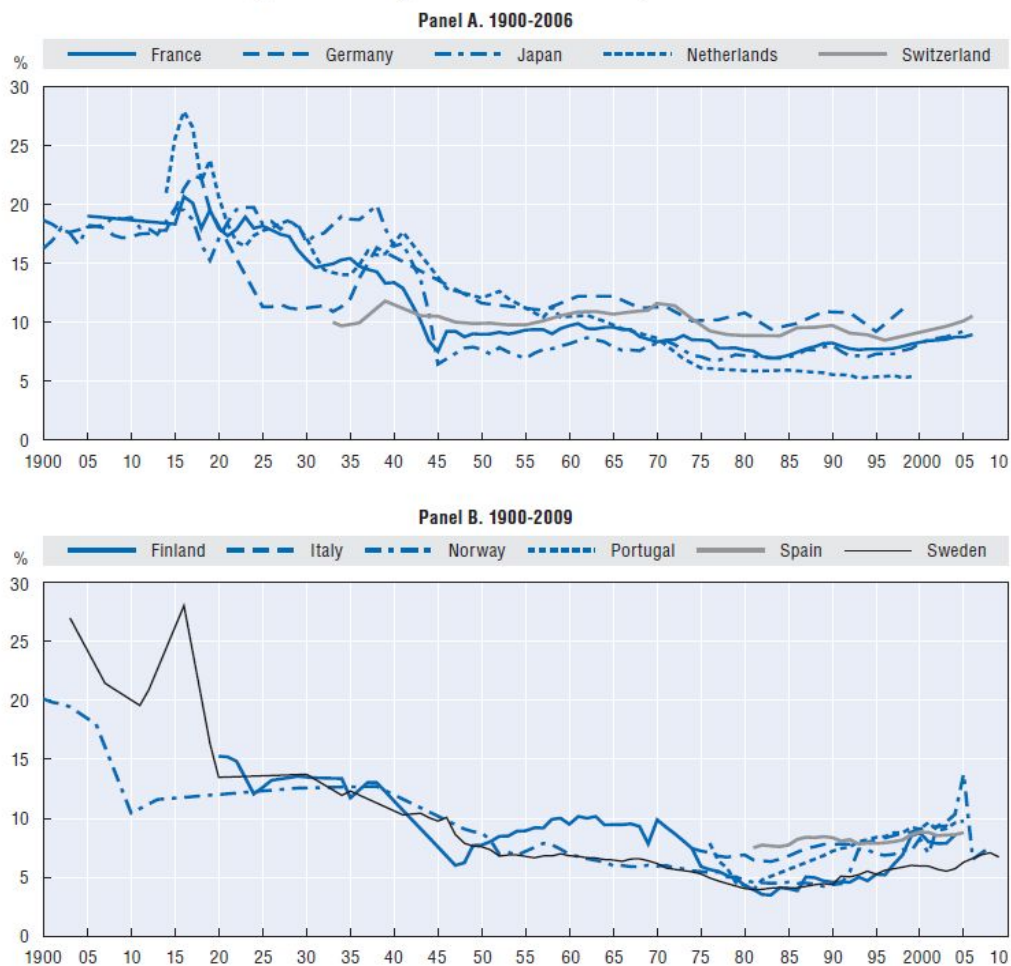
Figure 9.1. Top 1% income share, 1910-2008




Source: Alvaredo et al. (2011). Country delegate information: Australia (2000-2008) and Canada (1970-2007).

주: OECD(2011)에서 재인용

Figure 9.2. Top 1% income share, 1900-2009



Source: Alvaredo et al. (2011). Roine and Woldenström (2008); Sweden (2007-2009). Country delegate information: Switzerland (1970-2006) and Norway (1991-20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37218>

주: OECD(2011)에서 재인용

나. 상위계층 소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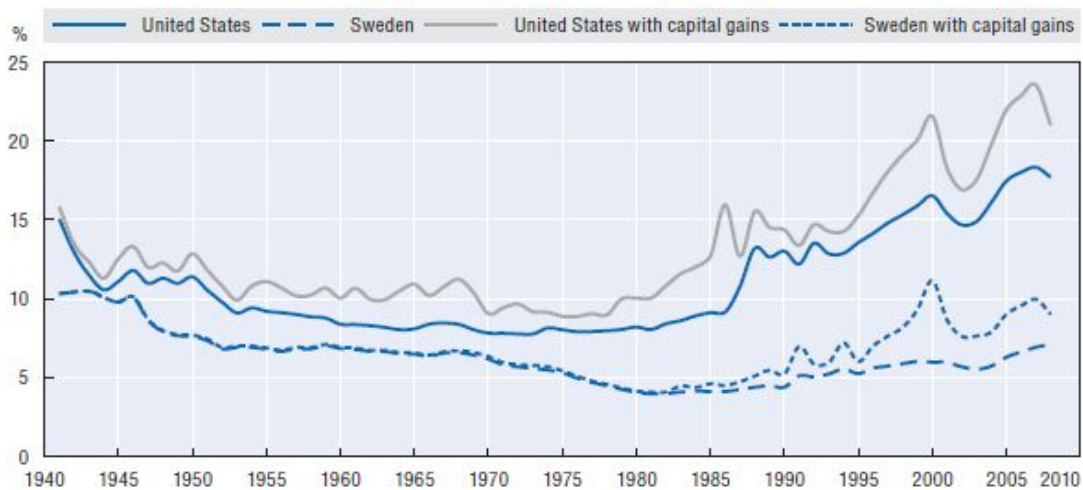
1) 소득 유형별 분류

□ 미국, 스웨덴 등 몇 개 국가에서 자본이득 증가가 최근 30년간 상위계층 소득 비중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자본이득*을 포함할 경우 상위계층 소득의 비중이 더 커지고, 증가 추세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자본이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이익

Figure 9.3. Effect of capital gains on share of top percentile, 1940-2008



Source: Sweden: Roine and Waldenström (2008); United States: Alvaredo et al. (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37237>

주: OECD(201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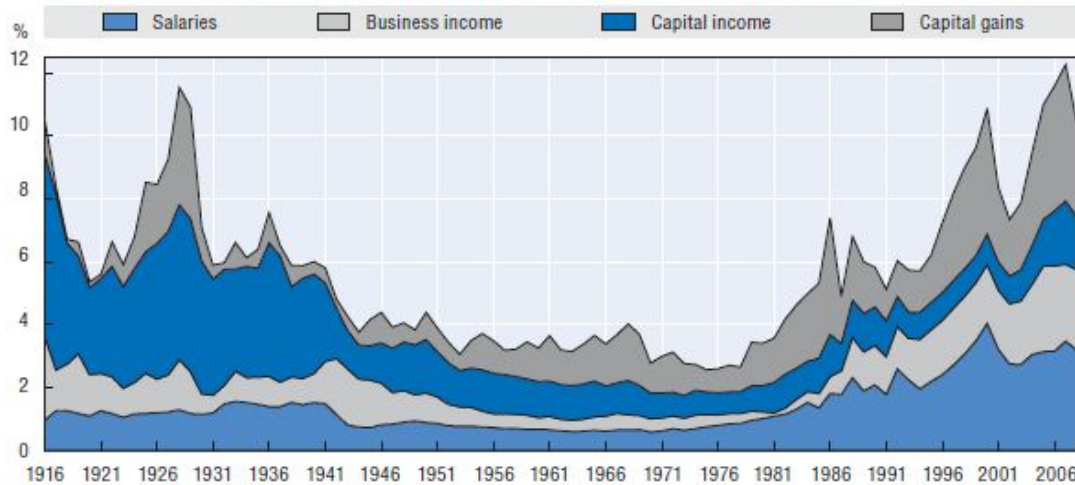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소득(자영업소득 포함)의 증가가 상위계층 소득 비중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등에서 스톡옵션(Stock option)의 실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 한국도 동 소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항목으로 국세통계연보상 근로소득 부분에 기입하고 있음

8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Figure 9.4. Top 0.1% income share and composition, United States, 1916-2008



Note: The figure displays the top 0.1% income share and its composition. Top 0.1% defined by market income including realised capital gains.

Source: Alvaredo et al. (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37256>

주: OECD(2011)에서 재인용

2) 직업 유형별 분류

- 상위 소득자의 직업 구성에는 고위 경영자와 금융업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미국의 상위 0.1% 소득자의 41%가 고위경영자이고 18%가 금융업 종사자로 나타남
 - 이 두 개 직업이 1979~2005년 상위계층 소득 증가의 70%를 담당함
 - 영국의 경우를 보면, 2007-08년에 금융업종 종사자가 전체 납세자의 3.2%에 불과한 데 비해 상위 1% 소득자의 21.2%를 차지함

Table 9.2. Percentage of primary taxpayers in the top 0.1%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cluding capital gains) that are in each occupation, United States, 2004

Occupation	%
Executives, managers, supervisors (non-finance)	41
Financial professions (including management)	18
Not working	6
Lawyers, real estate	11
Medical	4
Other	20

Source: Bakija et al.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38339>

Table 9.3. Taxpayers analysed by industry, United Kingdom, 2007-08

Industry	All taxpayers	Top 1%
Financial intermediation	3.2	21.2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13.0	28.5
Other	83.8	50.3

Source: Survey of Personal Incomes 2007-0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38358>

주: OECD(2011)에서 재인용

3) 기타 분류

그 외에도 성별, 연령 등의 분류를 적용한 분석도 있음

-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에서 상위 1% 고소득자의 80%가 남성이고,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
- 모든 국가에서 고소득자의 대부분이 40대 혹은 50대로 구성되어 있음

3. 상위계층 소득 비중 증가의 결정 요인

본 보고서에서는 상위계층 세전소득 비중 증가의 원인으로 1) 소득세 한계세율 인하, 2) 국제화 및 기술집약적 산업 발달, 3) 근로여건 변화를 꼽음


가. 한계세율 인하의 영향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에서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여 왔음

Table 9.9. Top marginal rates of central governments personal income tax (%)

	1981	1990	2000	2010
Australia	60	47	47	45
Canada	43	29	29	29
France	60	57	53	40
Germany	56	53	51	45
Italy	72	50	49	43
Japan	75	50	37	40
United Kingdom	60	40	40	50
United States	70	28	40	35

Source: OECD, data from country delegat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38472>

10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 (조세회피 유인 감소) 세율을 인하할 경우 절세 혹은 탈세 유인이 감소하여 신고 소득 증가
 - 그러나 과세당국의 감시, 처벌 등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조세회피가 소득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 (노동공급 및 투자유인 증가)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한계세율을 인하할 경우 노동자의 근로의욕 및 기업가의 투자유인이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함
 - 특히 기존연구에서 고소득층의 조세탄력성이 평균 소득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
 - Gruber and Saez(2000)는 저소득층의 조세탄력성은 0.18인 데 비해 고소득층은 0.57로 훨씬 높다고 주장함

- (자산 축적 속도 증가) 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의 자산 축적 속도를 증가시켜, 미래에 얻게 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킴

나. 국제화와 기술집약적 산업 발달의 영향

- 국제화의 영향으로 비숙련노동자의 공급이 풍부해져 기존 중간소득 계층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함

- 또한, 기술 발달로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래 고소득층을 차지하던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더 상승함

- 성과급, 스톡옵션 등 고위 경영자와 금융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변화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가져가게 됨

다. 근로여건 변화의 영향

- 노동조합의 약화와 최저임금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로 임금 격차가 확대됨
 - 최근 30년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규범[pay norms]”이 약화되어 능력의 차에 대한 임

금 수준 차이가 커짐

- 결과적으로 상위계층 소득 비중은 더욱 증가함

4.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증가는 곧 납세능력의 증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체계 적용을 통하여 세수 증가를 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많은 국가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
 - 미국의 경우,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0%(2005년 기준)를 납부하고 있으며, 영국은 24%(2006-07년 기준)를 납부함*
 - * 2005년 상위 1%의 소득비중은 미국 17.4%, 영국 14.3%
- 상위계층 소득 비중의 증가는 불평등도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정비도 필요함
- 세제가 누진적일수록 재분배 효과가 커지고, 이미 모든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진적인 소득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음

Table 9.6.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verage PIT rates

	United States (2004)	France (2005)	United Kingdom (2000)
Full population	11.5	3.8	15.0
Percentile 0 – 90	5.4	1.8	9.7
90 – 95	11.6	4.5	15.8
95 – 99	16.4	7.0	21.7
99 – 99.5	21.4	11.6	27.7
99.5 – 99.9	23.8	16.4	30.5
99.9 – 99.99	25.1	22.3	33.2
99.99 – 100	26.2	28.8	34.5

PIT = Personal income tax.

Source: Piketty and Saez (200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38415>

주: OECD(2011)에서 재인용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계세율의 변화는 소득 수준(혹은 소득신고 수준)에 변화를 가져오

12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므로 세율 인상이 꼭 세수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특히 소득의 조세탄력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세율인상이 소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 조세지출의 축소(예를 들어, 각종 비과세감면 폐지/한도 제한)는 한계세율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평균세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임

○ 조세지출 감소를 통한 재분배는 법정세율 변화를 통한 감소보다 시장왜곡의 정도가 약하고, 노동공급 감소 정도도 비교적 작음

□ 조세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소득, 자산, 부동산 등에 과세하는 방법 등이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 혹은 논의되고 있음

○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세와 동일하게 투자유인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 부동산의 가격 및 그에 따른 수익(주택임대소득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우리나라 현황

1. 기존 연구 및 자료 현황

□ 현재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상위계층 소득분포에 대해 연구한 문헌은 없음

○ 국내의 소득분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작위 추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됨

○ 기존 연구에 활용된 설문조사 자료로는 1) 가계동향조사, 2) 가계금융조사, 3) 재정패널조사, 4) 노동패널조사 등이 있음

- 설문조사 자료 활용시 고소득층 표본의 과소 표집으로 인한 오차와 소득 축소 응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에 대한 국세통계가 1966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함
 - 1966~1997년의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98년 이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
 - 국세청 발표 자료를 토대로 소득의 정의, 분리 기준 및 구간 등을 조정하여 상위계층 소득 비중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주요국 신고자료 현황¹⁾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연도	1913-2008 (97개년)	1908-2005 (95개년)	1920-2007 (88개년)	1921-2008 (88개년)	1886-2005 (119년)
과세단위	가구	가구(~1989) 개인(~1990)	개인	개인	개인
소득정의	총소득 (소득공제 제외)	총소득 (~ 1975 소득공제 제외)	총소득	총소득 (~1957 과세소득)	총소득

주: 1)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2. 우리나라의 상위계층 소득 비중 및 구성 현황

가. 국세통계연보 자료 활용

- 국세통계연보상 소득상위 1%의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상위 1%의 인구 및 소득 비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봄
 - ※ 다만,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인원(소득, 세액) 및 비중의 연도별 단순 비교로서, 해석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종합소득) 2010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약 15만 8천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동 인원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약 41조 1,830억원(총종합소득금액의 41.1%)임

14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 참고: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의 개념

- ◇ 종합소득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구간별 최저 6%, 최고 35%)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의 일종
- ◇ 종합소득금액(Taxable Income)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배당소득가산액 - 이월결손금 + 결손소득
- ◇ 결정세액 =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인원 비중)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비중은 2006~2010년 각 연도별 총납세인원의 2.1~3.0%로 나타남
- (소득 비중)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의 비중은 2006~2010년간 연도별 총종합소득금액의 37.7~41.1%로 나타남
- (세액금액 및 비중)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결정세액 합계액은 2010년 기준 약 9조 5,800억원(총결정세액의 72.7%)이며,
 - 2006~2010년간 연도별 동 인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은 총 결정세액 합계액의 64.3~72.7%로 나타남

<표 III-1>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단위: 천명, 십억원,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4,580	4,913	5,227	4,971	5,230
	종합소득금액	65,001	77,124	85,083	90,226	100,267
	결정세액	9,232	11,278	11,730	11,699	13,178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구간	납세인원	96	119	129	138	158
	종합소득금액	24,537	30,846	33,267	35,092	41,183
	결정세액	5,937	7,510	7,918	8,278	9,580
1억원 초과 구간의 비중(%)	납세인원	2.1	2.4	2.5	2.8	3.0
	종합소득금액	37.7	40.0	39.1	38.9	41.1
	결정세액	64.3	66.6	67.5	70.8	72.7

출처: 국세청, 「2007~2011 국세통계연보」

□ (근로소득) 2010년 근로소득세 납세인원 중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약 16만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며, 동 인원의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은 약 27조 7,990 억원으로 총근로소득금액의 11.2%를 차지함

*** 참고: 근로소득세 관련 용어의 개념**

- ◇ 이하에서의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및 그 금액을 지칭함
- ◇ 근로소득금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 결정세액 =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인원 비중)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비중은 2006~2010년간 연도별 총납세인원의 0.7~1.1%로 나타남
- (소득 비중)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의 비중은 2006~2010년간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총액의 8.4~11.2%로 나타남
- (세액금액 및 비중)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 에 대한 결정세액 합계액은 2010년 기준 약 5조 6,400억원(총결정세액의 36.2%)이며,
 - 2006~2010년간 연도별 동 인원 에 대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합계액은 총결정세액 합계액의 27.5~36.2%로 나타남

<표 III-2> 근로소득세 납세인원, 근로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단위: 천명, 십억원,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소득세	납세인원	12,595	13,376	16,046	14,295	15,177
	근로소득금액	166,955	190,745	206,761	220,935	249,058
	결정세액	11,566	14,114	14,182	12,852	15,586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구간	납세인원	84	92	107	113	160
	근로소득금액	13,942	17,155	19,508	20,392	27,799
	결정세액	3,194	4,100	4,334	3,538	5,640
1억원 초과 구간의 비중(%)	납세인원	0.7	0.7	0.7	0.8	1.1
	근로소득금액	8.4	9.0	9.4	9.2	11.2
	결정세액	27.6	29.1	30.6	27.5	36.2

출처: 국세청, 「2007~2011 국세통계연보」

16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자료의 결합)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합산한 총납세인원 중 각 소득별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합은 2010년 약 31만 8천명(1.6%)이며, 동 인원에 대한 소득합계(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는 총소득합계의 19.7%를 차지함
 - (인원 비중) 소득별 1억원 초과 인원의 합은 2006~2010년간 연도별 총(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인원의 1.0~1.6%로 나타남
 - (소득 비중) 소득별 1억원 초과 인원의 합에 대한 소득합계액은 2006~2010년간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총액의 16.6~19.7%로 나타남
 - (세액금액 및 비중) 소득별 1억원 초과 인원의 합에 대한 결정세액 합계액은 2010년 약 15조 2,190억원(총결정세액의 52.9%)이며,
 - 2006~2010년간 연도별 결정세액 합계액은 총결정세액 합계액의 43.9~52.9%로 나타남

<표 III-3>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자료의 결합¹⁾

(단위: 천명, 십억원,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총 납세인원	17,175	18,290	21,273	19,266	20,407
	소득금액 합계	231,956	267,870	291,843	311,160	349,325
	결정세액	20,799	25,391	25,912	24,551	28,765
소득별 1억원 초과 구간의 합	납세인원	180	212	236	250	318
	소득금액 합계	38,479	48,000	52,774	55,485	68,982
	결정세액	9,131	11,610	12,253	11,816	15,219
1억원 초과 구간 비중	납세인원	1.0	1.2	1.1	1.3	1.6
	소득금액 합계	16.6	17.9	18.1	17.8	19.7
	결정세액	43.9	45.7	47.3	48.1	52.9

주: 1)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원천세)의 납세인원 및 소득금액을 결합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인원 및 소득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비중 계산

출처: 국세청, 「2007~2011 국세통계연보」

-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해 얻은 2006년 결과 값을 OECD 보고서 및 기존 문헌에서 추출한 주요국 최근자료 값과 비교하여 보면,
 - 한국의 상위 1% 소득 최솟값은 1억원인 데 비해 미국은 335,861US달러, 호주는 199,383호주달러

러, 일본은 1,379만엔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임

- 전체 소득세 세수 중 상위 1%의 소득세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43.9%로 미국의 40%와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의 24%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국가별로 자료 가용 범위에 따라 집계연도, 소득정의, 과세단위 등에 차이가 나므로 국가 간 일괄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표 III-4> 주요국 상위 1% 소득 수준 및 최소값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상위 1% 소득 비중 ¹⁾	16.6%	17.7%	15.4%	13.3%	8.8%	9.2%
상위 1% 소득 최소값 ¹⁾	1억원	USD 335,861	-	-	AUD 199,383	1,379만엔 ²⁾
상위 1% 소득세 비중 ³⁾	43.9%	40%	24%	-	-	-

- 주: 1) 주요국 상위 1% 소득 자료는 OECD(2011)에서 재인용하거나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에서 추출, 미국·호주 2008년, 영국·캐나다 2007년, 일본 2005년 기준
 2) 일본의 상위 1% 소득 최소값은 Moriguchi and Saez(2007)에서 인용
 3) 상위 1% 소득세 비중은 OECD(2011)에서 재인용

나. 설문조사 자료 활용

- 본 장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표본 수가 비교적 많은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계산함
- 설문조사 자료 활용시 고소득층 표본의 과소 표집 및 축소 응답 문제로 인해 상위소득 비중 분석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으나, 상위소득의 소득유형별, 직업유형별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함

1) 재정패널조사 가구원용(한국조세연구원, 개인단위)을 활용한 현황 분석

-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약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가구원용(표본 수 약 7,000여 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18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 개인 단위의 자료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상위소득 분석에는 소득을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연간소득 항목¹⁾을 사용함
- 데이터클리닝 작업중인 2011년 자료를 제외한 3개년 자료를 분석함
- 2008~2010년 재정패널 자료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각각 6.7%, 7.3%, 7.7%(가중치 적용시 5.0%, 5.5%, 6.0%)로 나타남
- 3개년 동안 상위계층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임

<표 III-5> 상위 1%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재정패널조사¹⁾)

(단위: 명, 백만원)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전체표본 수	7,071	7,134	7,086	22,916,069	23,202,784	24,313,758
1% 표본 수	71	71	71	229,161	232,028	243,138
전체소득 합	167,487	169,566	166,998	533,479,574	534,424,204	569,357,373
1% 소득 합	11,281	12,355	12,814	26,736,927	29,170,008	33,925,022
비율	6.7%	7.3%	7.7%	5.0%	5.5%	6.0%
%						
전체소득 평균	24	24	24	23	23	23
1% 소득 평균	159	174	180	117	126	140

주: 1) 한국조세연구원, 「2008, 2009, 2010 재정패널조사 가구원용」

- 상위 1%와 10%의 소득구성을 보면, 전체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이 작아지고 사업소득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기타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자본소득의 비중은 전 계층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자본이득(부동산 및 금융상품 거래 차익 등)을 포함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1)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됨

<표 III-6> 상위 1%, 10% 소득 구성 (재정패널조사¹⁾)

소득구분	전체	상위 10%	상위 1%
근로소득	68.4%	68.2%	48.6%
사업소득	23.7%	29.8%	48.3%
자본소득 ²⁾	2.7%	2.0%	2.8%
기타소득 ³⁾	5.2%	2.0%	0.3%

주: 1) 한국조세연구원, 「2010 재정패널조사 가구원용」, 가중치 적용
 2) 부동산임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3) 정부이전 소득 등

-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값을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의 자료를 통해 주요국의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 한국에서는 사업소득 비중이 가장 큰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상위 1% 자본소득은 2.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난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의 자본소득은 각각 10.8%, 19.5%, 1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단, 국가별 소득분류 기준이 상이하며, 주요국 현황은 소득세 신고서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이므로 일괄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표 III-7> 주요국 상위 1% 소득 유형별 구성 비교¹⁾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근로소득	48.6%	57.7%	67.6%	81.2%
사업소득	48.3%	29.0%	12.9%	7.9%
자본소득 ²⁾	2.8%	13.3%	19.5%	10.8%
기타소득	0.3%	-	-	-

주: 1) 주요국 소득유형별 구성 자료는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에서 추출, 미국 2010년, 캐나다 2007년, 일본 2005년 기준
 2) (미국, 일본) 주택임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캐나다) 투자 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2) 가계금융조사(통계청, 가구 단위)를 활용한 현황 분석

- 2006²⁾, 2010, 2011년 가계금융조사는 약 1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 조사함
 - 가구 단위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본 장에서 사용한 소득 자료는 연간 경상소득³⁾ 항목임
 - 가구주의 직업 유형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어 상위 1% 고소득자의 직업유형별 구성 현황을 분석할 수 있었음
- '06, '10, '11년에 상위 1% 가구의 소득 비중은 각각 6.5%, 6.9%, 8.2%로 나타남(가중치 적용시 4.1%, 5.7%, 7.0%)
 - 2006년에 비해 2011년에 상위 1% 가구의 소득 비중이 1.7%p(가중치 적용시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8> 상위 1% 가구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가계금융조사¹⁾)

(단위: 가구, 백만원)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2006	2010	2011	2006	2010	2011
표본 수	8,275	10,000	10,517	14,351,735	16,648,372	17,499,491
1%	83	100	105	143,517	166,484	174,995
전체소득 합	298,996	396,039	434,412	490,954,944	628,130,808	702,039,153
1% 소득 합	19,434	27,224	35,415	20,101,519	35,839,319	49,017,273
비율	6.5%	6.9%	8.2%	4.1%	5.7%	7.0%
%						
전체소득 평균	36	40	41	34	38	40
1% 소득 평균	234	272	337	140	215	280

주 1)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2010, 2011 가계금융조사」

- 상위 1% 가구의 가구주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서보다 관리자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 2006년에는 “가계금융조사”의 전신인 “가계자산조사”로 진행됨

3)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됨

- 단, 상위 1% 가구주의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오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표 III-9> 2011년 상위 1%, 10% 가구주의 직업 구성(가계금융조사¹⁾)

(단위: 명, %)

직업구분 ²⁾	전체		상위 10%		상위 1%	
전체	10,518	100	1,052	100	105	100
관리자	386	3.67	127	12.07	25	23.8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90	11.31	219	20.82	24	22.86
사무 종사자	1,356	12.89	222	21.10	11	10.48
서비스 종사자	878	8.35	68	6.46	6	5.71
판매 종사자	865	8.22	97	9.22	16	15.2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08	6.73	50	4.75	7	6.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85	8.41	71	6.75	4	3.8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96	9.47	133	12.64	7	6.67
단순노무 종사자	1,007	9.57	13	1.24	1	0.95
군인	54	0.51	9	0.86	0	0.00
실업자, 가사, 학생, 은퇴자 등	2,192	20.84	42	3.99	3	2.86

주: 1)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 활용
 2)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준함

-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통해 얻은 상위 1% 소득자 직업유형별 결과를 기존 문헌에서 인용한 미국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 한국은 금융업 종사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양국 모두에서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꽤 큰 것으로 나타남

<표III-10> 한미 상위 1% 직업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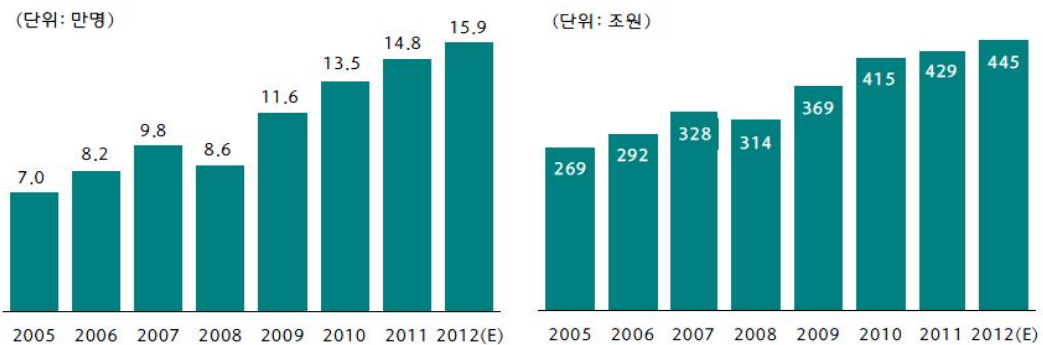
	한국	미국 ¹⁾
관리자	23.8%	36.3%
전문직 종사자	22.9%	24.1%
금융업 종사자	-	13.9%
무직	2.9%	4.3%

주 1) Bakija et al.(2010)에서 2005년 자료 인용,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 비금융업종만 포함

다. 금융기관 리포트

- 국내 금융기관 보고서는 주로 소득상위 개념이 아닌 자산 관점에서 금융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부자’ 혹은 ‘부유층’에 관한 조사를 수행
- ‘대한민국 부유층의 자산관리’(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하나은행 PB고객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자산관리 및 라이프스타일을 위주로 분석
 - (부유층 인구) 자체적으로 추정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유층의 인구는 2011년 14.8만명이며, 2012년에는 15.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유층 인구는 2009년과 2010년에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부유층 인구의 증가 속도는 완만한 상승세(2011년 10%, 2012년 7%)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부유층의 금융자산 규모) 국내 부유층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는 2011년 기준 429조원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4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11년 기준 부유층 금융자산 규모는 전체 개인금융자산 규모의 19% 수준

[그림III-1] 국내 부유층 인구 수 및 국내 부유층 보유 금융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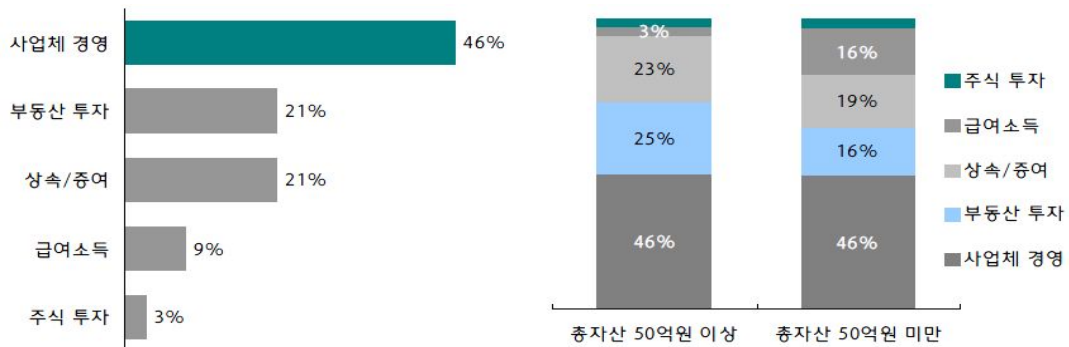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2, 「대한민국 부유층의 자산관리」

- (부유층의 자산구성) 자사 PB고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평균 총자산은 94억원이며, 이 중 약 52%를 금융자산으로 보유
- (부유층의 자산형성 과정) 사업체 경영이 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 상속·증여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총자산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상속·증여 비중이 높은 반면, 총자산 50억원 미만 보유자들은 급여 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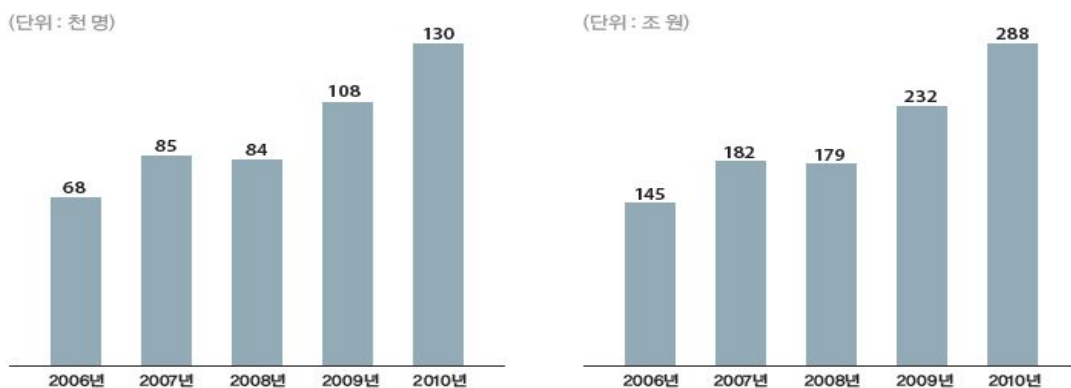
[그림III-2] 자산 형성 과정 및 보유자산 규모별 자산 형성 과정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2, 「대한민국 부유층의 자산관리」

- ‘한국 부자 연구: 자산 형성과 투자행태, 라이프스타일’(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는 ‘2011 한국 부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
- (한국 부자의 규모)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정의한 한국 부자 인구는 2010년 말 기준 약 13만명, 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288조원으로 추정
 - 전체 국민의 상위 0.26%가 총개인금융자산의 13%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 부자의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 이후 매년 20% 이상 증가

<그림 III-3> 한국 부자 수 및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1.7, 「한국 부자 연구: 자산 형성과 투자행태, 라이프스타일」

24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 (자산 구성) ‘2011 한국 부자 실태조사’결과,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은 평균 약 34억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자산을 58.1%, 금융자산을 36.9%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나금융 보고서와 달리,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IV 결론

- 연구 대상이 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상위 계층 소득의 비중은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고소득층 직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고위관리자 및 금융계층 종사자의 근로소득 급등이 상위 계층 소득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 한계세율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 세계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 임금체계의 변화 등이 상위계층의 소득 비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상위계층 소득비중의 증가는 곧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 능력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과세를 통해 조세수입 증가 및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음
 - 무조건적인 한계세율 인상은 노동공급 및 투자요인 감소로 인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세탄력성을 고려한 과세체계 설계가 중요함
 - 자본소득, 자산, 부동산 등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법도 논의되고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조세지출의 감소(e.g. 세금공제감면 완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함
-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국세통계연보의 자료에서는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체 납세 인원의 상위 1%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소득 비중은 약 16~20%를 차지하였음
 - 가계조사 자료에서는 상위 1% 소득비중이 5~8%를 보여 소득신고 자료의 결과에 비해 과소하게 나타났음

- 상위 1% 소득자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 자료의 직접적인 활용이 요구됨
- 기존 연구에서 소득분포 연구에 사용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상위 소득자 표본의 정확도가 떨어져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으며,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과는 소득세 집계자료와 간략한 방법론을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미시 수준의 소득세 신고 자료 확보 및 정교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함

참고문헌

-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2011. 12.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한국 부자 연구: 자산 형성과 투자행태, 라이프스타일」, 2011. 7.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한민국 부유층의 자산관리」, 2012. 2.
- Atkinson, A.B., and T. Piketty, 2007, *Top Incomes over the Twentieth Century: A Contrast between Continental European and English-Speak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Atkinson, A.B., and T. Piketty, *Top Incomes over the Twentieth Century: A Glob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Atkinson, A.B., T. Piketty and E. Saez, “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9, 2011.
- Bakija, J., A. Cole, and B. T. Heim, “Jobs and Income Growth of Top Earners and the Causes of Changing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U.S. Tax Return Data,” NBER Working Paper, 2010.
- Gruber, J. and E. Saez,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4, 2002.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조사, <http://panel.kipf.re.kr/>
-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부록 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목차

Editorial

An Overview of Growing Income Inequalities in OECD Countries

Special Focus: Inequality in Emerging Economies (EEs)

Part I. How Globalisation, Technological Change and Policies Affect Wage and Earnings Inequalities

Chapter 1. Trends in Wage Inequality, Economic Globalisation and Labour Market Policies and Institutions

Chapter 2. The Impact of Economic Globalisation and Changes in Policies and Institutions on Rising Earnings Inequality

Chapter 3. Inequality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Non-employed

Part II. How Inequalities in Labour Earnings Lead to Inequalities i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Chapter 4. Hours Worked, Self-Employment and Joblessness as Ingredients of Earnings Inequality

Chapter 5. Trends in Household Earnings Inequality: The Role of Changing Family Formation Practices

Chapter 6. From Household Earnings to Disposabl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Part III. How the Roles of Tax and Transfer Systems Have Changed

Chapter 7. Changes in Re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ver Two Decades

Chapter 8. The Distributive Impact of Publicly Provided Services

Chapter 9. Trends in Top Incomes and Their Tax Policy Implications

<부록 2> 연구 대상 국가 목록

순번	국가명	OECD 가입	제 9장 수록	WTI Database ¹⁾
1	한국	○		
2	네덜란드	○	○	○
3	노르웨이	○	○	○
4	뉴질랜드	○	○	○
5	덴마크	○	○	○
6	독일	○	○	○
7	미국	○	○	○
8	스웨덴	○	○	○
9	스위스	○	○	○
10	스페인	○	○	○
11	아일랜드	○	○	○
12	영국	○	○	○
13	이탈리아	○	○	○
14	일본	○	○	○
15	캐나다	○	○	○
16	프랑스	○	○	○
17	핀란드	○	○	○
18	호주	○	○	○
19	그리스	○		△ ¹⁾
20	벨기에	○		△
21	오스트리아	○		△
22	이스라엘	○		△
23	칠레	○		△
24	헝가리	○		△
25	아이슬란드	○		△
26	멕시코	○		
27	슬로바키아	○		
28	슬로베니아	○		
29	룩셈부르크	○		
30	에스토니아	○		
31	체코	○		
32	터키	○		
33	포르투갈	○		
34	폴란드	○		
35	남아공			○
36	모리셔스			○
37	싱가포르			○
38	아르헨티나			○
39	인도			○
40	인도네시아			○
41	중국			○
42	탄자니아			○
국가 수(개)		34	17	32

주: 1)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2) △는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국가를 의미. 이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령이었던 국가 등 다수의 국가에서 데이터 구축작업 진행중

작성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02-2186-2258)